

# “정당한 의정활동에 재갈? 안될말”

도의회, 한수원의 고소행위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전북도의회가 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는 '한수원'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주)새만금솔라파워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간협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조동용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데 따른 도의회 차원의 첫 번째 대응 조치다. 고소주체는 새만금솔라파워지만 이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81%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사실상 한수원과 한 몸

통이라는 점에서 이번 규탄결의안은 공공기관인 한수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김대오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재난경제생태에너지사업 민간협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조동용의원은 그동안 다른 민간위원들과 함께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고 의미 있는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민간위원이자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공적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일체 소송은 과잉하고, 처벌을 원하는 고소행위로 대응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

의원 하나쯤은 누를 수 있다는 폭력적이고 불상당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조동용 의원이 다른 민간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및 방송 출연을 통해서 주장한 사실들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취지 또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지역상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들이었다. 특히 골프모임 의혹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이 골프모임이 있었던 사실만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고 한수원 직원이 직위해제된 바가 있다. 이처럼 사의 추구나 일방적인 비방과는 거리가 먼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한수원이 새만금솔라파워를 앞세워 고소행위로 대응하는 것을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는 개별 의원의 문제가 아

니라 도의회 전체의 문제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피고는 조동용 의원 혼자가 아니라 전북도의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피고자 국회의원이었다면 공공기관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소행위를 서슴치 않고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면서 "물지마시 고소로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대 공공기관의 폭거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한수원의 몰상식한 고소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향후 한수원을 상대로 한 도의회 차원의 총력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유호상 기자

##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협력 강화해야”

이병도 도의원, 도·교육청에 촉구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주거, 일자리 등이 결합된 지역개발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청과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통합행정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382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 초등학교 10곳 중 5곳이 전교생 60명 이하이며, 이 중 60%가 농어촌지역에 있다. 전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3만 미만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도내 농어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남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하나로 통합하는 차원의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출범시켜 교육청과 함께 기관 간 협력모델 발굴과 공동교육사업을 추진, 직접적 인구유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경남사례를 참고해 전북지역 농어촌지역에도 즉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지방이 살리는 '교육과 청년'에 달려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청년을 중심으로 주거와 일자리, 문화체육환경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지가 전북 지역의 인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도청과 교육청은 기관 간 협약을 맺어 지금보다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또한 농어촌지역의 교육, 주거, 일자리 등을 결합한 통합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 “LH행복주택 공실 세대 대책 절실” | 김철수 도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본회의 채택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지만 일부 행복주택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공실 세대로 방치한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전북도의회가 요구하고 나섰다.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정읍,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도의회 건의안이 23일, 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김철수 위원장에 따르면, 정읍과 김제의 행복주택을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전북권역의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7,017세대 중 2,119세대는 아직

도 세입자를 찾지 못해 공실 세대로 방치돼 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부동산 양극화와 전정부지로서 치솟는 집값을 두고 2030 청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시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남아있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비판했다. LH행복주택은 대학생과 20·30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2018년 2만 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3만6천 호의 사업이 예정된 행복주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5만6,842호 가운데 5,263호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12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한 정읍 첨단과학단지 인근에 건설된 행복주택은 전체 600세대 중 378세대(전체의 63%)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어 전국에서 행복주택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한 김제 검산동의 행복주택을 포함한 혼합단지도 현재까지 공실률이 82%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장기간 공실 상태가 심각하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의

스튜디오 아파트로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근처에 부지에 지역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전북지역만 놓고 보면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김철수 위원장은 "정읍 행복주택의 경우 주변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R&D기관 6곳에 600명 규모의 근무인원과 학생 연구원 등 입주수요가 상당한 데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실정"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의회는 LH공공임대주택 공실 세대 해소를 위해 입주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기관 공급이나 기숙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LH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도쿄 올림픽 불참·선수보호책 마련을”

이명연 도의원, 건의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1)은 23일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 불참과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선수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연 의원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성화봉송시도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해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역사 왜곡을 반복하고 있는 일본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역사 퇴행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과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원칙에 따라 남북 단일팀이 사용하는 한반도

기 내에 독도 표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것을 거론하며, "IOC는 이번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독도 표기를 삭제할 것을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에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명연 의원은 "일본이 끝까지 독도 표기를 강행하고,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악습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올림픽 불참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참 선언에 앞서 일생일대의 기회이고, 올림픽을 위해 피땀 흘려 준비해온 선수들에 대한 올림픽 참가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유호상 기자

## “농어촌공 전북본부 내 지사 추가 신설”

이한기 도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가 전북지역 농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미래농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내 지사를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3일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한기 의원(진안·더불어민주)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내 지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9개 지역본부 88개 지사에서 지난해 기준 52만2,483ha에 이르는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북지역본부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9만9,377ha에 이르는 농지를 관리하고 있고, 매출액 역시 4,778억 원으로 전년(5,417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북지역본부는 수해면적과 매출액 등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지사를 두고 있어 전남본부(18개 지사), 경북본부(17개 지사), 경남본부(13개 지사), 충북본부(13개 지사) 등 타 지역에 비해 관리면적 대비 지사 수가 훨씬 부족한 실정이다. /유호상 기자

이러한 이유로 통합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주·완주·임실지사나 무진장지사는 전주와 장수에 있는 지사 사무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워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행정서비스 혜택이 감소함으로써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한기 의원은 "현재 전북지역본부는 매출액이나 수해면적만 봐도 지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므로, 농어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북지역본부 내 지사를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늘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에게 전달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내 지사를 추가로 신설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 “노을대교, 균형발전 차원서 필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가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 건설을 국가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을대교는 국가 차원의 해안 국도 완성과 낙후된 서해안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지난 20여 년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국가 계획에서 제외돼 왔다. 23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강동화 전북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전주시의회 의장)는 전날 경기 성남에서 열린 제25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에서 "국가도로망 구축은 지역의 성장판과 같은 필수 SOC"라며 "전북의 백년대계는 물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노을대교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회장은 "내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개통, 2023년 새가우터 챔버

리대교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 고창 대축도 신어항 설치 등 지역발전의 교두보가 마련된 상황에서 노을대교 건설은 전북에 새 희망을 불어넣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강 회장의 제안 설명 후 균형 있는 국가도로망 구축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고, 이는 자치본권의 큰 밑거름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노을대교 건설을 위한 국가(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 회장은 "노을대교 사업은 현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토부의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낙후된 서해안 지역의 부흥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을대교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상 기자

## 도의회 신임 윤리특위 위원장에 이한기 도의원

“투명한 의회 구현 최선”

전북도의회 제11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제11대 제4기 위원장으로는 이한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이, 부위원장은 김만기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이 선임됐고 이어 윤리특별위원회 의 역할 등에 관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제4기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한기 위원장은 진안군의회 3선, 전 진안

군의회 의장, 제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으며, 현 진안제헌군의회 회장,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한기 위원장은 "제11대 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1년여 남기고, 마지막 윤리특별위원으로 선임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의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의원들이 스스로 청렴의식을 높여 투명한 전북도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 인구 성장잠재력 높일 특단 대책 필요”

강용구 도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지만, 고령인구 전국 3번째인 전북이 더는 손을 놓고 기다릴 문제가 아니다"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북이 진행중인 인구정책은 190여 개로 크게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농촌·다문화, 도시재생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다. 강용구 의원은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실제 저출산 분야의 사업은 입산부가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찾아 지원받아야 하고, 사업마다 지원금을 받는 방식과 준비할 서류가 많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 분야도 도내 청년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사연 대부분이 농업과 창업에 집중돼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인·적성 교제 한 권을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산발적이고 편향돼있는 인구정책이 하나로 묶여져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이뤄져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정책사업에 통합 예산을 묶어 출생, 입학, 졸업에 맞춰 현금지원 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축사매입사업 사후관리대책 마련을”

김만기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만기(고창2) 의원은 23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축사를 매도한 축산인이 다시 타 시·군으로 이전해 다시 축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전한 지역에서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예산자원을 통해 매도한 축산인에 대해서는 재축산업 현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재사육 운영 방지를 위한 타업종 전환 유도 등 적극적인 사후 관리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억 1,077억 원을 투자해 전체



현업축사(59만 9,000㎡)의 72%를(42만 8,000㎡) 매입했고, 매입한 축사는 철거 후 수립조정 등 생태 복원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왕궁 정착농민의 가축분뇨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익산천 수질(총인)이 지난 2010년 4.593mg/L에서 2020년 0.110mg/L로 97% 개선되고, 악취 또한 2012년대비 8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호상 기자

## “작년 수해때 6개 시군 재난예경보시스템 미작동”

한원수 도의원

전북도의회 한원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도내 일원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대규모 수해 당시 남원시 등 도내 6개 시·군의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수해원인규명 조사활동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관리당국의 수위조절 실패 등 댐관리 부실이 홍수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밝힌 바 있지만, 도내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 밝혀진 사실이다. /유호상 기자



결국 댐관리 당국의 과실이 더해져 기존의 예경보 시스템도 활용하지 못한 전북도 재난예경보의 부실 대응이 피해를 키웠던 셈이다. 문제는 또 있었다. 올 4월말 복구가 완료됐어야 할 소규모 시설은 6월 현재 준공율이 71%에 불과하고, 중규모와 대규모 시설은 50% 이하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장이 9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호상 기자